

육아정책 소식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7월 6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이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 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단설 설립이 어려운 곳에서 공립 취학 수요에 부응하고자,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였다.

〈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 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유아모집정지’ 기준을 신설*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
- 「유아교육법」 제8조의3(교육명령)에 따라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교육’ 이수 명령 권한을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감에게 위임
-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보다 내실 있게 관리·지원해 나갈으로써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활용으로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교육부는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 등하굣길 교통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학교안전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어린이 TAAS 웹서비스)은 기존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웹서비스;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도로교통공단)을 초등학생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교내외 안전 위험요소를 찾아서 표시하고 개선방안을 만드는 안전지도 만들기(Mapping) 동아리 활동과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추진 중이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사용하여 내실 있는 안전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며,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를 통해 관련 설명자료(카드뉴스 및 사용자 안내서 등)를 배포할 예정이다.

향후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안심통학로 집중지도사업 및 어린이 보호구역 운용 지원(컨설팅) 사업 등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력을 통해 검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활용뿐 아니라, 관계기관 협업 및 현장 교육관계자 의견수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의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8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였다. 정책의 주된 수요자인 학부모들에게 개선 방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돌봄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에 참석하는 5개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학부모단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을 위해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와 학부모, 교사, 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를 거쳐,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시간, 인력 운용, 교원의 행정업무 등 돌봄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학교 내 요인에 대한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 개선방안 과제 및 추진 방법 〉

| <div style="background-color: #555;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목표 돌봄 여건 개선을 통한 돌봄 확대 및 질 제고 </div> | |
|---|---|
|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 ①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전담사 근무시간 마련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수요를 반영한 돌봄 운영 시간 확대 •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 ②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돌봄교실 업무 추진 조직 운영 • 교육(지원)청 주도의 거점형 돌봄 운영 |
|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 ③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 공급 확대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와 통합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 ④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를 위한 행·재정 지원 강화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지속 •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지원 |

〈 추진 방법 〉

- (교육부) 돌봄 운영 시간 확대, 전담사 적정 근무시간 마련,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 운영 확대 등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향 제시
- (교육청) 시도 여건 및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마련
- (국립학교)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향 적용

향후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시도의 여건 및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운영 지침)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 보육사업안내를 7월 1일에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3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영유아 등·하원 관련 보호자 사전협의 절차를 명시하고,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내 영양사 배치기준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집 폐지 시 지자체가 보호자에게 타 보육서비스의 내용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 시 지원 조건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보육사업안내 개정 내용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21.3.3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사전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 부모 등 보호자와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
- 영유아 보육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인접·동일 시군구 내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 공동활용 영양사는 교대로 어린이집에 반드시 상주하며 법정 근무시간(주40시간)이 확보되도록 근무계획을 세워 관리
- 공동활용 어린이집의 영양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하도록 지침에 추가 포함
- 어린이집 폐원 시 영유아의 연속적인 보육권 보장을 위해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 폐지 또는 휴지 통보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기관,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바로 안내해야 함.
-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전체 정원총족률이 아닌 영아반 총족률 50% 이상'으로 기준 완화
- 농어촌 지역 소재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에 지원되고 있는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을 영유아 '현원 11인 이상'에서 '현원 5인 이상'으로 완화
- 연장보육교사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근거에 연장보육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 감소를 추가

개정된 보육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부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시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21년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약 3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000명(4,005명 → 5,005명)의 중증장애아동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을 840시간으로 120시간(월평균 10시간)만큼 추가 확대하였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총 5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분야 | 내용 |
|-------------------|---|
|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 체계를 내실화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 |
|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여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지원 |
| 아동학대 인식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 |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 |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분기별로 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재 시·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과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구분 | 내용 |
|------------------------------|---|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
|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 | 보육사업 관련 위법행위나 보육료 등을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 |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 |
|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 변경 |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에서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은 삭제하여 현실화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 |
|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 '일시 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 |
| 보육교직원 제출서류 편의 증진 |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 파일 첨부로 같음하도록 하여 보육 교직원 편의 증진 |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의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앱 간편결제 및 대화 서비스 시작

여성가족부는 KB국민은행과 함께 9월 17일, 오후 1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이돌봄 간편결제서비스 '돌봄페이' 오픈 행사를 열었다.

'돌봄페이'와 '돌봄톡톡' 서비스는 지난 10여개월 동안 운영한 '일시연계서비스' 결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긴급 돌봄 요청 시 아이돌보미들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돌봄페이'는 아이돌봄 모바일앱에서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돌봄톡톡'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앱으로 소통하는 실시간 대화 서비스로, 이용자용 앱에서 여러 명의 아이돌보미앱으로 일대다 방식으로 대화를 요청해 돌봄 요청 및 참여

의사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개통을 기념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돌봄페이’ 이용소감 이벤트를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KB국민은행도 「엄마·아빠 힘내세요! 돌봄페이 있잖아요~」 이벤트(9.23~11.19)를 개최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바일 간편결제와 대화 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와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